50년대 「韓日회담」 대표 金溶植前외무 인터뷰

65년엔 文化財등 8개項만 청구

대표를 맡았던 前외무장관(79)은 15일간 예현안이 돼 있는 종군위

65년 韓日기본조약의 기초가 됐던 50년대韓日회담(2、3차)의 한국측 수석

했다。

그는 특히 『우리 외무부 공무원들이 과거 한일회담에 관한 공부를 너무 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기도했다。

—회담당시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는지요。

『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日帝가 강탈해간 금괴 문화재등을 반환받는 「원상회복」의 차원에서만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원상회복문제에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美國을 비롯한 2차대전때의 연합국측이 日本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차원에서만 요구하기로 원칙을 세운데따른 것이었습니다。따라서 한국측은 당시 일본측에 대해 △조선은행(한국은행전신)에서가져간 금괴 은괴 △문화재 골동품 △전시에 동원된 노무자의 일급등 8개 항목의 반환、즉 원상회복만을 요구했던것입니다。연합국측이 원상회복만을 요구한것은 1차대전이후 패전국 獨逸에 대해 막대한 「배상」을 요구했던것이 결국 독일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고 이것이 히틀러를 등장시켜 결국 나치독일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즉 2차대전후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려주면서 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정부가 배상문제에 관한 청구권은 포기한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배상문제를 다시 거론할수 있다는 뜻인지요。

『그렇습니다。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교섭을 재개해야 합니다。50년대 회담때는 일본과 국교도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우호관계에 있지 않습니까。더구나 국제여론과 일본국내의 여론도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특히 이 사실은 내가 처음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배상을 하겠다」고 공식발언했습니다。이 사실은 지금 외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구보타가 종군위안부문제를 상정한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문제는 日帝와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배상을 요구할수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한일기본조약때 모든 청구권을 일괄 타결했기때문에 이제 종군위안부문제는 한국정부와 당사자사이의 문제라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나 60년대 들어서서 한일회담 막바지에 金鍾泌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大平)日외무장관이 합의한 「무상원조 3억달러、유상원조 2억달러는 8개항목의 원상회복부분 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종군위안부 배상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일본정부는 필리핀등 동남아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불법행위(戰時국제법위반)를 인정、「배상」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회담당시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었는지요。

『51년10월에 첫 예비회담을 열고 이듬해 1월 본회담이 시작됐는데 일본측은 당초 한국측의 對日청구권제기에 맞서 對韓청구권을 제기해왔습니다。처음부터 충돌을 빚었죠。즉 일본측은 헤이그협약 47조의 「개인재산은 몰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한국에 남기고간 일본인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한국측은 이에 대해 美군정법령33호에 의해 몰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재산반환을 요구할수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이 개입、56년에 일본측이 이 청구권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陸貞洙〉

동아 1992. 6. 16

不法행위 比등에 배상先例

"외무부 당시기록부터 공부했으면…"

임지상사 TEL 445-7371